

EC통합과 한국기업의 진출 및 대응전략

글 : 이광현(고려대학교 교수)

1. 머릿말

최근에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유무역주의 퇴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외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제의 지역주의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럽공동체(EC)는 오는 1992년 말까지 역내 시장을 완전히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EC통합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된 주된 이유는 EC의 경제력 및 시장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EC가 통합되면 EC는 인구면에서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5배가 되는 3억2천만명, GDP규모에서 세계전체의 25%, 수입규모도 전세계의 40%를 차지하게 되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영향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EC 12개국이 통합 추진 일정에 따라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된다면 분명히 지역의 국가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EC가 '상호주의'를 내세워 우리나라를 비롯한 EC무역 흑자국에 대해 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 나라의 국내시장 개방실적이 저조할 경우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지역의 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다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EC시장은 유효구매력과 투자효과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동구권과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한국 정부와 기업의 EC통합에 대한 대응은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상당부분 EC시장은 동구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C통합

과 동구권 개방을 연계시킨 논의가 미진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래전부터 EC통합에 대비하여 다양한 진출전략을 수행해 온 일본기업의 현지화 노력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 그리고 통합 시한을 불과 1년여 앞둔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인수, 합병과 지역내 기업으로 대우받기 위한 역외 기업들의 직·간접투자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 기업의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것은 EC통합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지역 경제가 하나의 블록으로써 요새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않으면 통합이후의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 EC통합의 본질과 한국에 대한 기회와 위협

EC는 지난 1957년 EEC를 결성한 후 역내적으로는 회원국간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분업추진 및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역외적으로는 회원국 보호라는 입장에서 첨단 기술과 사양산업에 대한 대외 보호조치를 강화해 왔다. EC는 창설 당시부터 한동안 공동시장의 구축을 위한 활동을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내 관세철폐와 공동통상정책의 시행과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1970년대의 불황을 겪는 와중에서 EC회원국들은 그들사이의 교역도 상품의 안전기준,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율, 인허가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규제하였으므로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EC제국의 노력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단일 유럽법」은 우선 이러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경의 검문소를 제거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유럽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 단일화 작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벽을 제거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첫째, 역내 국경을 넘는 재화나 주민에 대한 세관과 경찰의 통제형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장벽, 둘째, 부가가치세와 물품세의 회원국간 차이에 기인하는 재정적 장벽, 셋째, 회원국이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규와 산업표준의 형태로 존재하는 재화, 노동, 자본의 역내자유이동을 막는 장벽 등이다.

역내 시장의 통합에 따라 단일시장이 형성되면 고용이 약 1백80만명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6.1% 하락하고 역내 총 생산이 6.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노동과 자본이 국가 단위의 속박에서 벗어나 범유럽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연구개발비가 한곳에 집중되면 그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EC전체 경제활동의 20%를 차지하는 정부의 공공구매에 대한 입찰 기회가 국적과 관계없이 개방되면 유럽의 내수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EC통합이 실현될 경우 이러한 대규모 시장을 노려 국경을 뛰어넘어 역내로 밀려들 역외 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EC국가들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산업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여개의 국영기업을 민간에게 넘긴데 이어 최근에는 철강산업이 골치덩어리인 브리티스 스틸(BSC)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독은 정부가 전체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항공회사 루프트한자와 방위산업체 멧서슈미트의 주식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며 불란서의 경우에는 국영업체인 르노자동차 회사를 민간업체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고 이탈리아도 자동차회사 알파로메오와 화학회사 에니컬 등의 민영화를 마무리지었다.

또한 역내 민간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경제관 「별들의 전쟁」이라 부르는 기업들간의 인수 합병(M&A)경쟁이다.

특히 이같은 기업간의 인수 합병은 각국정부들이 자국대행기업들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 상호간의 합병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올리베티사는 92년의 EC통합을 앞두고 사상초유의 「범유럽기업」이 되기 위하여 이탈리아 자국기업들은 물론 영국, 서독, 불란서 등 모두 27개의 기업을 합병시켰다. 이러한 EC통합에 대한 대책수립은 역외국들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또한 민간차원에서 EC진출에 따른 지원방안 및 진출전략 수립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EC역내 국가들은 EC통합에 따라 EC의 역내 무역장벽은 대폭적으로 철폐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역내시장의 확대는 회원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 국가들 입장으로는 이러한 통합이 모든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우선 회원국들간의 경제통합자체가 역외국가들에게는 차별대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보호주의를 내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EC통합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위협요인과 기회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역내산업 경쟁력의 강화 및 생산요소 이용의 자유화에 따른 역내 제품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열세가 우려되며 역내교역 증가가 야기시킬 역외국간 대 EC 수출경쟁의 심화가 예견된다.

둘째, EC가 새로 제정하는 공동 표준이나

기술명세 규제법칙때문에 수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EC역내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로마조약 115조에 의거한 EC역내의 간접 수입 규제와 회원국들의 국별 쿼터가 폐지됨과 동시에 가전제품, 신발, 도자기, 자동차와 같은 몇몇 센시티브품목에 대한 EC공동쿼터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C는 역내시장이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필요한 회원국들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및 반덤핑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역외국가들의 기업합병이나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면에 EC공업표준통일 및 기술규격 조화로 인하여 단일수출상품 제조가 가능하게 되어 생산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간접수입규제 해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국의 수출증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보다 중대한 문제는 이러한 역외 장벽 구축이라는 위협요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크고 잠재력있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이라는 기회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진출전략

EC통합의 움직임이 일본 경제력의 급속한 성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될만큼 EC각국으로부터 최우선적인 경계의 대상이 되어 온 일본은 EC통합으로 EC의 일본에 대한 보호장벽이 강화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즉 일본은 단일국가로서는 대EC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EC의 보복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쿼터 및 반덤핑 관

세부과 등 EC각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각종 규제와 국내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압력을 받고있다. 따라서 일본은 EC통합으로 이러한 규제 및 개방요구가 EC전체 국가에 일률적으로 확대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EC통합에 따른 보호주의적 색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 시장개방노력의 강화

일본은 자유무역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는 무역 흑자국이므로 우선 먼저 자유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EC가 상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은 개선되지 않는 무역불균형, 직접투자에서 보여지는 일본의 위협적 진출, 그리고 일본시장에의 진출곤란 등으로서 이것이 상호 양보라는 입장에서 협상을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익균형을 기조로 한 상호주의로 대처한다는 발상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사전적으로 시장개방의 노력을 선언하고 있다.

나. 국제기준의 제정

비관세장벽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제정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GATT와 같은 다자간 기준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기준, 규격이 국제기준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개별 협상보다 다자간 협상을 통한 포괄적 타결 추진

EC의 보호무역주의화에 대처하기 위해 EC에 개별교섭의 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GATT를 통한 상호주의의 배척, 무차별 원칙을 재확인하고 GATT의 기능 강화에 적극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라.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과 현지화

일본기업들은 EC통합후 현지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지공장설립, 현지기업의 합병, 매수 등 직접투자의 증대는 물론 업무제휴 등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최근 합병, 매수(M&A)방식에 의한 대 EC 투자를 늘이고 있는데, 이는 EC가 통합되기 전에 EC시장을 시급히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EC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독점 규제를 목적으로 기업의 M&A규제를 강화할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대 EC직접투자는 1987년중 65억 8천만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90%나 증가하였는데 최근에는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이외에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 제조업분야에서도 일본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투자의 증가는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본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 대한 투자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곧 단순 현지 조립생산이 현지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EC역내 기업(Insider)으로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종전의 Screw-driver 조립방식에서 Total 생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철저한 현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즉 합병, 매수시에 가급적 기존 인력 및 체계를 존속시키고 현지인 임원 및 종업원의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소요 자재의 현지조달 비율도 높이고 있다.

4. 우리의 대응전략

EC통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정부측면에서의 협상력 강화, 기업측면의 현지화전략, 자금조달과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한 관련 주체

들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호무역주의 회피를 위한 다자간 협력의 강화

대 EC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호주의에 근거한 시장개방 압력이 EC로부터 나올 것이 명백하므로 점진적인 시장개방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시장통합조치의 진행상황에 부응하여 EC의 각종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 EC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EC와의 협상시 개별교섭을 배제하고 GATT의 명분을 이용한 다자간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

나. 기업 국제경쟁력의 제고

EC통합은 특히 역내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서 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및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가격면에서 역내 생산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의 확충과 생산성 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분화 및 계열화, 기업별 생산특화 등을 통하여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EC시장은 동일상품을 대량 소비하는 미국시장과는 달리 다수 국가로 구성되어 역내국간에도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수요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상품의 대량수출보다는 여러가지 종류의 상품을 소규모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정책을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현지투자의 확대

EC통합후 우리나라 기업이 역내기업과 동등

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에 현지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통합 이후에는 현지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현지공장 설립, 현지기업의 합병, 매수 등 직접 투자의 증대는 물론 사업제휴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현지투자는 현지의 첨단기술의 습득 및 활용이 용이하고 역내 정부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작 및 M&A 등을 통하여 현지기업의 생산 및 판매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서도 EC에 대한 진출방식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현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라. R&D의 현지화

EC는 화학, 의약 및 식품분야 그리고 정밀 기계분야가 특히 강한 한편 전자 부문에서는 범 EC공동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R&D 거점의 확보와 기술제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 EC관련 정보의 수집과 협력의 제도화

EC진출을 위해서는 정보수집과 이에 근거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EC통합 관련 정보로서 표준 규격 및 인증의 변경, 위생보건 환경 기준, 정부구매산업, 기술공동연구, 지적 소유권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진출하는 업종의 시장구조 및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진출국 및 진출형태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의 제도적 협력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불산업기술정보 1990년 겨울호에 게재된 글을 인용함 ※